

전남 27%가 노인... 고흥 65세 이상이 44%

한국, 노인 인구 첫 20% 돌파 '초고령사회' 초고속 진입
광주 17.5% 비교적 낮아...서·북·광산구는 20% 밀돌아

"일어나긴 했는데/ 잘 때까지 딱히/ 할 일이 없다", "자원봉사 하는 것도 받는 것도 늙은 사람", "쓰는 돈이 슬값에서 약값으로 변하는 나이", "연상이/ 내 취향인데/ 이제 없어."

올해 초 출간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라는 책은 지난 1994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 노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글들로 가득하다. 일본 노인들만 그럴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찍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불과 7년 만에 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에서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비율이 20%)로 진입했다.

전남은 더 심각하다. 수도권 집중화로 청년 인구는 갈수록 빠져나가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정책 효과가 속도감 있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늙은 지역'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6명)의 20.0%를 차지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섬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2017년에 노인인구 14.2%(725만 7288명)를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올해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애초 정부는 2026년께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7년 여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셈인데, 고령화 추세가 가파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17.0%)이, 비수도권(22.38%)보다 낮았고 시도별로는 전남의 고령인구 비중이 27.1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경북(26.00%), 강원

(25.33%), 전북(25.23%), 부산(23.87%), 충남(22.23%)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인 경기(16.55%)와 서울(19.41%), 인천(17.63%)은 20%를 밀돌았다. 광주는 17.51%였다. 세종은 11.57%로 고령 인구 비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48만 6231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에서는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2만 2548명(2019년)→43만 5880명(2020년)→44만 5198명(2021년)→45만 7481명(2022년)→47만 874명(2023년) 등으로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전남 전체 인구는 186만 8745명(2019년)→185만 1549명(2020년)→183만 2803명(2021년)→181만 7697명(2022년)→180만 4217명(2023년)에 이어 올 9월 179만 1496명으로 180만명선마저 붕괴된 상태다.

전남에서도 고흥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44.3%(2023년 말 기준)로 가장 높다.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라는 얘기다. 전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도 홀로 사는 노인 비율도 25.6%에 달했다.

광주의 경우 서구(17.9%), 북구(18.5%), 광산구(11.9%)는 20%를 밀돌았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관련 시설과 지원 정책도 적지 않다.

당장, 전남지역 경로당만 9223개에 이르고 지난해 이들 경로당에 운영비, 방·난방비 및 양곡비 등으로 370억 4500만원을 투입했다.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노후생활 지원 대책도 많다.

내년에는 6만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868억원을 들인다. 홀로사는 노인 1200명에게 30억원을 투입, 반려로봇을 지급하고 4만3000명에게는 78억원을 지원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주도해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개혁, 노인 연령 상향 등 초고령 사회 대비에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지역 사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위해서는 전남도, 지자체 뿐 아니라 정부의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지용 기자 dok2000@/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 충장로 '성탄절 인파' 성탄절인 25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를 찾은 수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연인, 친구들의 손을 잡고 성탄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尹, 2차 출석 불응 공수처 조사 무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차로 출석을 요구한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조사가 무산됐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후 6시 현재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은 없으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라고 요구한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오후까지 출석을 기다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자 이날 조사가 무산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휴일인 이날 출근했던 오동은 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오후 6시에 퇴근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더 이상의 출석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지 결정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26일 이후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런 상황도 결정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정오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등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촉구하며 청사를 찾아 공수처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한편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19일, 23일, 24일 잇따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 등을 전해왔으나, 이날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독감 유행...진료 대기 4시간 걸려 ▶6면

KIA 정재훈 투수 코치 "내년 준비 최선"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영화 속 그곳 충남 논산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영문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ENERGY SENSE CAMPAIGN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